금속노조통신 067호

발행일 2022년 10월 27일(목) ❙ **발행인** 윤장혁 ❙ **SNS** 페이스북 · 카톡채널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직접 ·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원청노동자다”

10월 27일, 노동자 피 어린 대법원 판결 … 금속노조, 현대차그룹에 사내하청 해소 직접교섭 요구

한국 사법부가 현대 · 기아자동차 직접 ·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원청 현대 · 기아자동차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파견법 시행 24년, 해당 소송 12년, 대법원 계류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은 10월 27일 현대 ·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79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159명, 기아차 271명 등 430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정년이 지난 노동자와 투쟁 중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2차 업체 소속 노동자 두 명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며 파기환송 했다.

금속노조는 10월 27일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계류만 6년, 지긋지긋한 불법파견 20년 이제는 끝장내자’ 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문제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와 현대차그룹이 직접 교섭하자고 요구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오늘 판결 나기까지 긴 시간 투쟁한 동지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라면서 “사법부는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금호타이어, 아사히글라스 등 제조업 사업장 불법파견 소송 건에 관해 즉각 정규직 직접고용 판결을 내리라” 라고 촉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정몽구 ·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사죄하고, 불법파견 희생 · 피해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라며 “20여 년 동안 저지른 불법을 인정하고 금속노조 교섭에 나와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독려했다.

신성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철폐 투쟁에서 현대차 류기혁, 박정식 열사와 기아차 윤주형 열사가 운명했다. 많은 동지가 감옥에 갇히고 손배 수백억 원을 맞았다” 라면서 “12년 만에 나온 판결을 환영할 수만은 없다” 라고 비통해했다.

유흥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사법부는 무엇이 겁나서 이 재판을 12년이나 끌었느냐” 라며 “현대차 재벌은 그동안 불법행위 증거를 없애고 있었다. 이 증거인멸을 재판부가 비호하고 이제야 판결했다” 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오늘 승소 당사자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파견법 시행 이후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겪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조법 2 · 3조 개정 투쟁에 모든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양경수 총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법대로 하자. 정몽구 · 정의선이 감옥 갈 차례다” 라면서 “정몽구 · 정의선 부자 처벌은 한국사회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를 근절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총연맹 위원장은 “노조법 2 · 3조 개정 투쟁 이유는 불법파견 때문이다. 원청과 직접교섭 할 수 있었다면 12년이 넘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한국사회 불법파견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힘차게 싸우겠다” 라고 결의했다.

노동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키고 바꾼다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윤석열 규탄대회 … “노동자 참여 보장 산안법 개정 투쟁 중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산별노조연맹들이 자본과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막고, 노조·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10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아홉 달이 넘었지만 원청과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법이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은 시행령을 개악해 원청 사장 처벌 규정을 없애려고 하고, 재벌·대기업을 대변하는 대형 법률 업체들은 재판 중인 사건에 위헌제정 신청을 하는 등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만들었다”라며 “한 해에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세상에서 더는 살 수 없다며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 투쟁으로 법을 만들었으니,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것이다”라면서 “민주노총이 투쟁해서 노동자를 죽고 다치게 한 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겠다”라고 결의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겸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273일째지만 자본을 위한 윤석열 정권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446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폭로했다.

손덕헌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과정에 노조·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라며 “노동자가 산재 예방과 현장개선에 참여하는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죽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산안법 개정은 노동자들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법 개정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행법이 보장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실천하면 죽음과 골병드는 현장을 일단 막을 수 있다”라고 독려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전체 노동안전보건 활동과 능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중에 노동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둔 조직은 금속노조 등 두 곳에 불과하며, 지부·지회에 전담 조직을 두고 중대재해 대응 활동 벌이는 산별은 금속노조가 유일하다.